

# 새 정부와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 새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보를 마련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는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 강신구 | 한서대 교수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 것은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덕분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당시 내리막길을 달렸던 미국 경제에 엄격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생산성 증대 등에 힘을 기울인 노력이 90년대 들어 약효를 보인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채택한 공급 중심(Supply Side)의 경제 정책이 빛을 발해 10년 뒤 정보기술(IT)을 앞세운 신경계를 창출해냈던 것이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강화에 힘을 기울였다. 연구개발 투자·벤처 창업의 장려 등으로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연출해낸 것이다. 그래서 '공급'을 우선하는 미국 공화당의 경제 정책이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당을 먹여살렸다는 우스개가 한때 나돌기도 했다. 이런 업적으로 레이건은 미국 시민에게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모양이다.

## 인수위원회 과학기술인 단 1명

지난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과학기술계는, 노 당선자의 과거 행적이나 공약 그리고 주변 등을 고려해 볼 때 차기 정부가 '분배'에 치우친 나머지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다. 물론 노 당선자는 대선 과정 중 한국과총 초청 포럼 등에서 과학기술 5위 진입, 10만 우수두뇌 양성 연구개발 예산 7% 인상, 그리고 과학자 중심 사회의 건설 등 야심찬 과학기술 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우려는 인수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나타

났다. 인수위원들이 '분배' 성향 일색으로 꾸며진 데다가 과학기술 전문가는 단 1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과학기술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사였다. 과학기술은 제2경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고, 노 당선자가 당선 직후 다른 사회·종교 모임에는 얼굴을 보이면서도 역대 대선 당선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던 과학기술자 신년 인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과학기술 정책이 홀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욱 증폭됐던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이후 이런 우려들은 차츰 가시게 됐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국정지표에 '과학기술자 중심 사회 건설'을 네 번째 순위로 올려놓는가 하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3%로 늘리는 등의 청사진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과학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은 한국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과학기술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범국가적인 계획이 불가피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자의 과학기술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 차기 정부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특보를 마련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는 시스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